

사법부 70주년... 사법독립 · 신뢰 강조

문 대통령, "국민 신뢰 뿌리째 흔들려... 스스로 바로잡아야 법관 선서가 지켜지도록 사법부 독립 철저히 보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보인다.

〈관련기사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부 창립 70주년 맞아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가 갖고 있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 국민대표, 각급 법원 판사들이 함께 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법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최영에 국가인권위원장, 정성진 양형위원장, 김현 대한변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제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민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 등 법원 인력이 어수선한 점을 고려해 70주년 기념행사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마련했다. 아울러 과거 기념식은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지만, 올해 기념식은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열렸다. 이곳은 판사 임명식, 대법관 취임식이 열리는 장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많은 시국시건 변호를 맡은 등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1976년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전 판사와 여성 인권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성희롱 문제의 법적·제도적 해결의 기틀을 마련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이 수여됐다. 26년 간 법원공무원으로 헌신한 이홍용 민원상담위원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날은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1948년 9월13일은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받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된 날로, 사법부는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뉴시스

가을이 보내는 초대장 태권도원 愛 가을 가족캠프

내달 20일부터 1박 2일 · 20여 가족 선착순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태권도원 愛 가을 가족캠프(이하 캠프)를 태권도원 등에서 개최한다.

3~5인 기준 20여 가족(총 60명)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는 이번 캠프는 태권도원 입소와 함께 가족 전원이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진행한다. '태권도 시범공연 관람'과 '태권 트램플린', '신나는 운동회' 등 태권도를 경험하지 않은 참가자도 쉽고 흥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가을 밤하늘 관측'(반디랜드 천문과학관)과 '할머니와

삼베짜기'(무주군 치목마을) 등 지역의 우수한 체험 프로그램을 캠프에 포함하여 가족 모두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원과 무주군의 청정자연에서 진행되는 캠프에 많은 참가를 바란다"며 "가족간의 사랑을 더욱 키워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캠프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태권도원 홈페이지(www.tkdwon.kr) 또는 전화(063-320-0563)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세계잼버리 시군연계 콘텐츠 발굴

전북도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시군 공무원,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연구원, 청소년·관광분야 전문가 등 총 35명을 대상으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시군연계 콘텐츠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시군 공무원,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연구원, 청소년·관광분야 전문가 등 총 35명을 대상으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시군연계 콘텐츠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서 완주 로컬푸드 금요장터 열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주 완주 로컬푸드 금요장터가 열리고 있다.

13일 완주군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도농상생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금요장터를 지난 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요장터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직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농특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로컬푸드를 알리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로 마련됐다.

장터에서는 완주로컬푸드직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진류농약 검사 등 안

전성이 검증된 농특산물을 직접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금요장터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고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주관으로 운영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금요장터뿐만 아니라 공단 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이 총리 "금리 문제, 심각하게 생각할 때 됐다"

"차정부 금리 인하 빛내는 분위기 조성해 가계부채 역작용"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금리가 문제인 정부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텐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박연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희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올리면)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2014년 8월에서 2015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인위적으로 급격히 금리를 인하여 지금까지 시중이 약 600조원이 더 풀렸다"며 "유동자금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 됐고 한국 경제가 구조개혁을 실패하고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금리 실패로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 정권에서 책임을 물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 총리는 "당시 금리 인하에 이유는 있었지만 결국은 빛 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늘리는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가 바뀐 뒤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어촌 소득향상 위한 방안 모색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3일, 제356회 정례회 중 고창 상하목장과 도 산하기관인 전북수산물수출연구소 수박시험장에 대한 현지의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 확대를 위한 농수산업의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강용구 위원장(남원 2)은 "외지인의 농촌 방문 기회 확대를 지역 내 기타 문화 콘텐츠 등과 연계 및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6차산업이 농가의 소득을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전세자금보증, 다주택자 · 연소득 1억원 이상 제한한다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상관없이 가능 전세대출금 관련 실거주 · 주택보유수 확인

앞으로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전세자금 보증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현재는 소득이나 주택보

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은 없다.

앞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 일 경우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즉 주택보유수나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제공되던 전세보증이 앞으로는 2주택 이상자와 1주택자의 경우 합산 소득 1억원 이상은 제한되는 셈이다.

이같은 제한이 가해진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전세에 거주하며 '갭투자'하거나 지인간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보증을 가입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요건을 엄격히 하면 전세대출을 목적이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국은 전세대출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지 주택보유수는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실거주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전세보증 연장도 제한된다. 단 전세 보증 만기 전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고 자가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